일러두기

「2007년 외교백서」는 2006년 1년간 외교통상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에 발생한 중요 사안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7년 외교백서」를 비롯하여 1990년부터 발간된 외교백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장 2006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 1 절 국제 정세 개관

1. 국제 정치 정세

개 관

2006년 국제 정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란의 핵 문제 등으로 핵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중동지역의 불안정과 국제 테러리즘의 지속은 국제사회의 불안정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 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이 활발한 외교적 행보를 보였으며, 신종 전염병 문제, 기후변화, 자연 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7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채택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되어, 12월에 6자회담이 1년 1개월만에 재개되었고, 2007년 2월 13일에는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란의 핵문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국제 정세의 전반적인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37호를 통해 이에 대한 일치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6년에는 에너지 ·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러시아는 막대한 석유 · 천연가스 보유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등 일부 유럽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조치와 관련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중국은 아프리카 · 중동 ·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이와 같이 각국은 에너지 · 자원 문제를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 외교 · 안보와 연관된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였다.

세계화의 조류에 따른 범죄행위 국제화, 빈부격차 확대, 신종 전염병 확산, 환경 · 기후 변화에 의한 대규모 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의 세계적 확산은 국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개별 국가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 등을 통한 다자적 대응 노력도 전개되었다.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2006년에도 이어졌고,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도 증가했다. 이러한 초국적 ·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과 자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각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지역별 정세 동향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대테러, 비확산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1] 지역을 중심으로 WMD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주도하고,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 · 하원을 장악하자, 미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과 전후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하에 선거 직후 보수강경 국방 · 외교라인을 교체하고, 이라크 관련 정책대안 검토를 위해 이라크연구그룹(ISG: Iraq Study Group)을 구성하였다.

1) 2001년 미국 국방부는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를 통해 테러 등 비대칭적 위협(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 수단을 가진 국가나 집단들이 몰려 있는 지역을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로 명명하였다. 북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코카서스 산맥, 동아프리카, 발칸 등이 이에 속하며 이 지역을 연결하면 활 모양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일방주의적 접근보다 상황별 · 시기별로 다자적 접근을 시도하는 '일방적 다자주의' 외교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대테러 · WMD 비확산 등 큰 틀에서의 정책적 기조는 유지하되, 사안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교 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원국간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6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EU 헌법조약을 대체하는 개혁조약(Treaty of Reform),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 공동 전략 및 EU 기구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U확대와 관련해서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2007년도 가입이 확정되어 EU는 27개 회원국, 인구 4억 9천만명, 국내총생산 13조불의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신 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2]의 우선 추진 분야로 지식 및 기술혁신 투자 증대,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 '유연한 안정성' (Flexicurity)[3]에 기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에너지 및 기후 변화를 선정하였다. EU는 경제 및 정치 통합으로서의 내부적 관계 강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등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북한핵 및 이란핵 문제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7년 1월 개최된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 정상들은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ASEAN 공동체 건설을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6년 5월에는 최초로 ASEAN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집중되어 있던 역내 협력을 테러리즘, 해상안보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여타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도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한편, ASEAN의 역외 협력체인 ASEAN+3와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중심으로 한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논의도 활발히 진전되었다.

---

2) 신 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 1999년 단일통화권 출범을 계기로 미국경제를 따라잡겠다는 경제발전구상인 리스본 전략이 EU에서 2000년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미미하자 제도와 기술혁신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리스본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여 채택한 전략이다.

3) 덴마크 노동부가 사용한 표현으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조합어. 유연한 노동시장과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및 실업자를 일터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말한다.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지만, 실업급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단기간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갖춘 제도를 가리킨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2005년~2006년간 12개국에서 대선이 치러진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일부 국가의 신정권은 과거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미국의 대외정책 등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이들 국가에 내재한 소득 불균형과 대중의 정치참여 증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의 신정권은 대중적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는 차별성을 보였으며,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문제,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정세의 불안정, 중동 평화 문제 등으로 불안이 계속되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처형 이후에도 계속된 폭탄 테러로 인한 치안 불안과 북부의 쿠르드족(Kurd), 서부 · 중부의 수니파(Sunni), 남부의 시아파(Shia) 등 종파간의 대립은 이라크 사회 전반에 불안을 가중시켰다.

2006년 7월 헤즈볼라(Hezbollah)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병사 사살 및 납치를 계기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도 양국이 휴전에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내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미국과 서방의 이라크 개입을 비판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반미 · 반서구주의 강화와 유럽내의 반이슬람 정서가 확대되면서 종교와 문명간 관점의 차이가 국가간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였다.[4)]

아프리카 지역은 9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간 분쟁과 내전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자유투표 등 민주주의 확산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역내 지역 분쟁을 감소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수단 다르푸르(Darfur) 지역의 무장세력간 무력 충돌, 다르푸르 지역의 반군단체와 정부군간의 무력 충돌 및 인권 상황의 악화 등과 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4) 이슬람의 예언자 무하마드(Muhammad)에 대한 풍자만화를 유럽 신문들이 게재함에 따라 이슬람과 유럽 국가들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슬람 국가들은 자국대사를 소환하고 이슬람 국민들은 외국대사관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사태도 잇달았다.

2. 국제 경제 정세

2006년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 신흥시장 국가들의 지속적인 고성장 및 일본, 유럽 경제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5.1%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BRICs(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국가들은 세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이루며 세계 무역확대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2006년 3.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주택 경기 침체, 소비 증가세 둔화, 원유 수입 부담 증가, 경상수지 적자 심화 등의 요인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 안정 및 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소비 지출과 민간 투자 지출이 다소 증대하기도 하는 등 미국 경기의 급속한 냉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은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하여 2.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다. 또한, 일본은행은 6년만에 제로 금리를 해제하고 금리를 0.25%로 인상했으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 엔화 가치는 2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현재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3위의 무역대국으로서 중국은 2006년 한해 전년 대비 수출이 27.6% 증가하고 수입이 19.9% 증가함으로써 1,775억미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10%를 전후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요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압력 등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와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부동산 안정화 조치 등 과열 경기 억제 및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러시아는 고유가로 인한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및 재정흑자의 증대로 경제 호황 추세를 유지했다.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하였으며, 총 대외 무역액도 2005년 대비 28.3% 증가하였고, 소비자 물가도 현저히 안정되어 정부 목표치인 9.5%선에서 억제되었다.

EU경제는 가계소비, 정부소비, 투자 분야의 순조로운 성장세에 힘입어 2000년 이래 최고의 성장률인 2.8%를 기록했다. 신규 회원국들도 자유시장경제 원리 도입과 외자 유치 등에 따른

생산력 증대로 견실하게 발전 · 성장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기침체,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의 경기 조정으로 2006년 3/4분기 경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다.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인 국제 유가는 2006년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고조되면서 80달러에 근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나이지리아 및 알래스카 유전생산량의 회복,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중단되었던 미국 정유시설 재가동 등 수급 상황의 개선 및 중동 정세의 안정 등에 따라 유가는 차츰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 2006년 상반기에 농업시장 접근, 농업 국내보조, 비농산물시장 접근 등 3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나, 이해 그룹별로 기존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G6 각료회의[5]에서도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주요국간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2006년 7월 협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협상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 회원국들이 조속한 협상 정상화를 적극 주장함에 따라, 2007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본격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을 통한 지역 차원의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DDA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교역 확대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3.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2006년 동북아 지역은 북한 핵문제 및 역내 국가간 역사인식, 영유권 주장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대테러 · 비확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5) WTO 회원국중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협상을 주도하는 6개국 : 미국, EC,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한 · 중 · 일 3국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주요 국가간 전략적 견제와 공조가 병존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국제 연대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북한은 12월에 1년 1개월만에 6자회담에 복귀하였으나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은행 북한계좌 동결 등에 대한 미 · 북간 입장 차이로 인해 6자회담 진전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2007년 1월 비로소 미 · 북이 베를린에서 전격 회동한 후, 2차 북핵 위기가 처음 발발한지 만 4년 4개월 만인 2007년 2월 13일에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관한 '2.13 이행계획'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13 합의는 합의문 내용에 구체적 시한을 명시하여 구속력과 이행력을 확보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론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각국의 균등 분담원칙을 규정한 점 등에서 제네바 합의(1994년)보다 진전된 합의로 평가된다.


안보리, 北핵실험 제재 결의 채택(2006.10.15, 유엔본부)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기존의 동맹관계 재조정과 세계적인 미군의 구조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2006년 5월 미 · 일 안전보장협의회를 열고 주일미군 재편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 · 미동맹도 보다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전시작전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주한 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일본은 미 · 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가운데 국제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체제 출범 이후 '대아시아 외교'를 강화하였다. 2006년 10월 아베 총리의

잇따른 방중 및 방한을 통하여 한 · 중 · 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가 재개되었으며,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중국과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등 역내 국가간 우호 · 협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미국 · 호주와 3개국 외상급 전략회의, 5월 미 · 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007년 3월 호주와의 일 · 호 안보공동선언 발표 및 외교 · 국방장관 안보전략대화(2+2회담) 창설 합의 등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 호주와 양자 및 3국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용적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2006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 · 태지역 안보, 경제 · 통상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관계에 있어서 2006년 1월 대만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 중지를 선언하는 등 정치적 · 군사적 차원에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강대국 러시아 재건'을 위해 정치 ·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방위 실리 외교를 전개하였다. 특히 중국과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대미 견제, 중앙아시아 및 극동 · 시베리아 등 접경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 등과 같은 포괄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발전시켰다. 2006년 3월에는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러시아의 해'를 개막하였고, 2007년 3월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 '중국의 해'를 개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군사력 현대화 및 무기 부문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난 · 식량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선군(先軍)사상'을 강조하고 핵무장의 공식화를 시도하는 등 사상 교육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였다.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균열을 보인 북한은 2006년 11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 12월 북 · 러간 재무회담 개최, 2007년 3월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 등 한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 · 경제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였다.

지역 차원에서 2006년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 2.13 합의 이행을 위한 5개 실무그룹이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화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또한,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아 · 태 지역내 협력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전개되었다. 2006년 5월 제5차 ACD 외교장관 회의(카타르 도하), 11월 APEC 정상회의(베트남 하노이)가 개최된 데 이어 2007년 1월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ASEAN+3 정상회의 및 제2차 EAS가 개최되었다. 특히 EAS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은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역내 국가간 에너지 개발 및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2절 2006년 외교정책 기조

2006년 우리 외교는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라는 비전을 지향하면서 변화된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5대 정책목표와 각 정책목표별로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정책목표 Ⅰ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①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 진전
② 한 · 미간 포괄적 동반자관계 발전
③ 한반도 주변국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④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지원
⑤ 동북아 다자대화 촉진

정책목표 Ⅱ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외교

① 전방위 정상외교의 체계적 추진
② 지역협력 외교의 적극 주도
③ EU 확대를 활용한 구주 진출 강화
④ 중남미 지역과 실질협력 확대
⑤ 개발협력을 활용한 아 · 중동 외교 내실화

정책목표 Ⅲ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①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증대
② 주요 국제기구 진출 확대
③ 유엔 개혁 관련 우리 입장 적극 반영
④ 보편적 가치 확산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 기여
⑤ 문화외교를 통한 연성국력(soft power) 증진

정책목표 Ⅳ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①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FTA 추진
② DDA 협상에서 우리 입장 적극 반영
③ 선진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④ 주요 통상현안 관리 및 수입 규제 적극 대응
⑤ 에너지 · 자원 외교의 전략적 추진

정책목표 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①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외교정책 지지 확대
② 지방의 국제화 지원
③ 재외동포 지원 체제 강화
④ '추한 한국인' 상 불식
⑤ 국민 해외활동 편의 증진

정책목표 Ⅰ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데 핵심 변수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7월 5일)와 핵실험(10월 9일) 강행 등으로 회담 재개 여건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도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전략적으로 대처한 결과 북한을 다시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고 2007년 2.13합의 채택에 이를 수 있었다.

또한, 한 · 미간에는 2006년 1월 양국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역동적이고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6자회담과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다자안보 대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구축 기반을 조성하였다.

정책목표 Ⅱ :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외교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기존의 주변국 중심의 외교틀을 넘어 우리 외교의 외연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 외교'를 펼쳐 나갔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3월 아프리카 방문을 위시하여 중동, 유럽 및 오세아니아 등으로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신규 시장 개척,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 등의 기회로 활용해 나갔다.

또한 유럽, 아 ·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중인 BRICs 등과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질협력을 증진하였으며, 아시아 · 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ASEAN+3 등 지역협력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책목표 Ⅲ :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와 높아진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국제적 기여를 증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국력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강화해 나갔다.

특히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 과정의 이면에는 선진국들의 개발 원조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규모를 2009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1%로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인권, 군축 및 테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새로이 대두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였으며, 유엔 사무총장 등 요직진출, 주요 국제기구 진출을 계속 확대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한편, 한류 확산이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문화외교를 통해 국가간 우호 ·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였다.

정책목표 Ⅳ :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세계화 및 무한경쟁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창출 및 주요 시장관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 대륙별 거점국가와 ASEAN 9개국 신흥시장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 선진경제권을 포함하는 16개국과 FTA를 타결하였다. 또한, EU, 캐나다, 인도와는 2007년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이며,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6],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7]와는 정부차원에서 협상 여건을 조성중에 있다.

6)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
7)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UAE, 카타르 6개국간 경제공동체

무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양자 교섭과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적극 도모하고,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에너지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였다.

정책목표 Ⅴ :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외교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해외여행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해외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국민과 함께 열린 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다양한 직접대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교자문 및 대외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국제화 활동도 적극 지원하였다.

재외국민보호와 국민 해외활동 편의증진을 위해 2005년 출범한 영사콜센터 및 신속대응팀을 더욱 내실화하는 등 영사 · 민원 업무를 중심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지속적인 혁신 노력

아울러, 외교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 · 조직 혁신을 추진하였다. 2005년 1월에 발족한 '외교통상부 혁신추진위원회'를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개방 등 임용제도 개선,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 주재관제도 개편 등 15개 과제에 대한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고위공무원단 제도 참여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개방과 경쟁'을 통해 외교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북한 핵문제, FTA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한 · 미자유무역기획단을 설치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고 재외국민보호 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2006년에 3개 대사관 및 2개 총영사관을 설치하였다.

한편, 2005년 12월 범정부 외교역량강화 T/F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국가 외교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